



무지개농성단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

일시 | 2015년 1월 7일(수) 오후 7시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회 | 병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제 | 일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토론 | 가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임연구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성소수자에게 한국사회의 인권을 묻다

일란 _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상임 활동가

2014년 12월 11일,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시청점거농성은 승리보고문화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승리보고 문화제에서 한 발언자는 “인간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실감”하며, “승리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요즘 ‘승리보고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다.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굴뚝농성 소식을 들었다. 문득 무지개 마법에서 풀려나 검은 현실로 돌아왔다. 이렇듯 마음이 무너진 것은 외로운 투쟁을 다시 시작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베풀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점거농성을 하면서 충분히 성취감을 느꼈던 나의 마음이 너무 험렁했던 것 같았다. 무안함을 털어내려는 듯 어딘가를 향해, 항변하고 있었다. “점거농성을 해야만 노조로 인정합니까?”라고 외치던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그것과 “점거농성을 해야만 사과를 하는 겁니까?”라고 외치는 성소수자들의 외침은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없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속 빈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도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면서 당당하게 반박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자격지심이 드는 것일까. 점거농성이 성소수자인권운동에서 여전히 낯선 방식이기 때문일까. 누군가에는 구태의연하고 상상력 없는 행위로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점거농성이 왜 성소수자인권 운동의 역사에서는 여전히 낯설 방식일까. 점거농성이 투쟁의 역량과 경험의 척도는 아니지만, 점거농성만으로도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성장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연이은 질문들에 답을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맥락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질문들에 답을 하고 싶어졌다.

익숙하기에 낯선 점거농성

점거농성은 쉽지 않은 투쟁방식이다. 집회, 단식, 삼보일배 등 할 것 못 할 것 다해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점거농성을 강행하는 것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점거농성이 세고 어려운 투쟁방식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여론과 공감, ‘그래 한 번 부

뒹쳐보자'는 동료와 조직, '당신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라며 달려와 줄 개인과 조직의 연대, 버틸 데까지 버틸만한 돈과 자원, 혹시 모를 공권력 투입을 대비할 강심장 ... 그러나 이렇게 갖출 거 갖추고 시작하는 점거농성이 많지는 않을 거 같다. 요즘에 점거농성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고립됐을 때, 할 게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든, 고립되어서 하든, 만약 성소수자들이 점거농성을 한다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있다. 되도록 많은 수의 싸우는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쟁인 성소수자들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그곳에서 '집단적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다니... 그러나 성소수자들에게 점거농성은 싸우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될 지경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장애인 운동에서 많은 영감과 감동을 받았다. 장애인 역시 성소수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투명인간과 같은 '비가시적' 존재였다. 그런 장애인들이 2000년대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동권'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권리임을 창안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고 외치면서 점거농성을 하고 선로에 몸을 뉘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기도 했다. 그 고단한 투쟁의 결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편의 증진이나 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고 시행의무를 통해 구체적인 의무와 연결되는 권리를 일정정도 쟁취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시 '비가시적 존재'에서 '가시화된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권리를 획득해온 역사일 것이다. 어떤 성소수자 활동가는 1997년 노동자 총파업 당시 수많은 깃발들 사이로 무지개 깃발이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고 회상한다. 그 무지개 깃발은 수많은 집회참가자들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징표였다고 한다. 그 뿐이겠는가. 처음 2000년 퀴어퍼레이드의 기획단이나 참여했던 50여 명의 참가자들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벽찬 설렘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그곳에서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현실에서는 그 자체로 감격스러운 정치적 행위였을 것이다. 2000년대 성소수자인권운동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에 맞선 싸움, 교과서 개정, 홍석천 커밍아웃, 엑스존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싸움 역시 치열하고 뜨거운 싸움이었지만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그곳에 집단적 커밍아웃을 하면서 저항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강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흐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무래도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운동이라 생각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7년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가 발의한 포괄적인 인권기본법이지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안들이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압력에 의해 삭제되어 인권기본법이라는 의미를 상실한 채, 오히려 '배제의 논리'를 정당화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했었다. 국가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한 성소수자인권운동은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을 조직하여 부당함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 주도의 인권담론에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개입하여 주도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투명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성소수자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와서 "나는 자랑스러운 성소수자입니다"를 외쳤다. 특히 '번개회의'를 통해서 구성된 개인들의 연대는 목적 보다 과정을, 조직보다는 개인을, 절박함 보다는 자긍심이 중심되는 싸움의 기반을 마련했다.

어떠한 불빛도 없이 동굴 속에서 혼자지내다가 거리로 나와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또 있을까.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싸움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렇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 속에서 있는 두려움에 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힘겨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실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은 거리로 나왔고, 거리에서 만났고, 그 과정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스스로를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으로 집단화된 주체’로서 인식했다. 그저 거리에서 함께 인권을 외쳤다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성과라고하기에 충분했다.¹⁾

무엇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운동의 큰 성과는 성소수자인권운동이 성소수자 이슈로서 다른 인권운동 진영의 이슈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촉발하는’ 싸움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당시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 국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혐오의 세력들은 다른 차별들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자신들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을 위계화하려는 혐오세력에 맞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배제의 논리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감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로 인해서 운동사회에 ‘인권’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권력에 대한 저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은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2007년 겨울,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시켰다.²⁾ 이러한 법안 저지운동은 보수/혐오세력들의 조직화된 형태로 표출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집단화된 대응의 시작이자, 성소수자인권운동에서 ‘인권관련법’이 핵심적인 의제로서 대두가 되었던 계기였다.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 앞에서 타협할 수 없다

인권을 보장하라. 얼마 전 서울시청 점거농성에서도 이 구호를 내세웠다. 우리가 수년간 이미 겪고 있듯이,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에서 우러난, 도덕적으로 정당한 주장으로 인식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구심, 심지어 적대감을 갖고 봐야 할 슬로건으로 비칠 뿐이다. 이러한 대립은 인권관련법이 종종 기존의 법률이 부적절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관련법은 때때로 지배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특히나 법관, 경찰 등에게는 ‘범죄자’나 ‘불법행위자’ 등 그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라는 요구로서 비춰질 때가 있다. 보수/혐오세력들에게 역시 인권법은 자신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식된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혐오 단체들은 “나쁜 인권 물러나라”를 외치며, 조롱했다.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정상성을 파괴하는 나쁜 제도일 뿐이었다.

1)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통한 집단화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식은 2008년 한국최초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국회의원 출마라는 현실 제도정치의 참여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것은 특정 정당의 개별인들의 결의라는 부분도 있지만, 성소수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그것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2) 2007년 말, 차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조직적 틀을 바꿔 싸움을 지속해나갔다. 또한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함께 전개했던 연대단체들은 반차별운동과 함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서 ‘반차별공동행동’을 출범하였다.

2011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사상 첫 ‘점거농성’은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즉 존재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켜낸 싸움이었다. 2007년 이후로 보수/혐오세력들은 보다 더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비판하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언론광고를 내는가하면, 세미나,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을 드러냈다. 급기야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균형법 92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혐오세력들은 조례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인권조례를 또 다시 누더기로 만들려 했다.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차별이었고, 빼야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혐오였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수/혐오세력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이라는 차별조항을 약한 고리 삼아 공격하면서 인권조례 자체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제정 운동진영을 악의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분열시키려 한 것이다. 애초에 서울시의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는 보수/혐오세력의 압력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 일부 조항을 빼거나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뭉뚱그리는 방식으로 타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소위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함께 해 온 ‘우리끼리’ 갈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수/혐오세력들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청소년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이 마치 대립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보수/혐오세력들의 농간과 무력하고 비겁한 결정권한자들 인해서, 인권단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몇몇 인권활동가들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게 원안대로 통과가 가장 좋은 결론이지만 통과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사유로라도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힘겹게 제안을 해왔다. 그러한 제안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다. 힘들고도 괴로운 마음과 상관없이, 그것은 분명 타협이었다. 성소수자 인권과 청소년 인권이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들 역시 이 무력하고 답답한 상황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공동행동도 절망감을 넘어 비통한 심경이었다. 그동안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던 주체들의 수고스러움과 절실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은 이미 2007년의 상황을 경험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포괄적 차별사유방식은 시행과정에서 차별을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차별의 위계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물러설 수 없었다. 운동진영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였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감이 형성될 즈음, 그 때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점거농성이었다.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 대책회의 자리에서 처음에 점거농성이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그 말은 답답한 심경을 담은, 얼마쯤은 농담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도 서울시의회 점거하자”는 제안에 또 다시 누군가가 “그래,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점거 한번 해보자”하는 장난기 가득한 답변이 오고갔었다. 그러나 금새, 점거농성은 최

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모아졌다. 점거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노동자, 장애인, 농민, 학생과 같은 어느 투쟁 주체들과 달리, 성소수자들이 점거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우리도 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이어, ‘성소수자 농성장이라 하면 혐오세력들이 몰려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뒤따랐다. ‘그렇게 몰려올 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자문도 해보았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혐오세력들과 부딪히면서 더 깊은 상처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뿐인가. 성소수자와 청소년 이슈는 기반이 취약한 운동인데, 다른 사회운동단체의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역시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점거농성에 돌입하는 것이지만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압력이 되는지도 막연했다. 혹여 혐오세력들에 의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폄하되거나 성소수자들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공권력의 투입이나 민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해서, 운동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까봐 걱정되었다. 이런 모든 걱정과 우려 보다 더 실질적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성소수자’만’의 이슈로 축소되면 어떡하지?’하는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을 찬찬히 생각해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두 번째 성소수자만의 문제로 설정될 때, 사회적 지지나 연대기반이 취약한 성소수자 이슈가 힘을 받지 못하면서 고립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참 무모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거농성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저지운동 이후 축적한 성소수자인권운동의 경험과 성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인권이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배제의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공간은 언제나 침해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권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핵심이며, 성소수자들은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여 지켜낼 힘이 있다. 바로 이러한 성과를 믿었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사상 첫 점거농성을 하였다. 30여 명의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그 당시 구호는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는 꼭 필요하다’였다. 점거 이후 일부 진영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면담 등을 추진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라고 압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 등에 소식이 널리 알려졌고, 다양한 연대가 확장되었다. 결국 민주당은 단호한 투쟁과 연대 확산에 부담을 느껴 원안에 가까운 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보수/혐오세력들이 문제 삼았던 차별금지 항목이 모두 원안대로 포함됐고, 경기와 광주 인권조례에는 없는 집회의 자유가 포함됐다.³⁾ 서울시인권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비롯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⁴⁾⁵⁾

3) 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등 일부 제한조치가 달린 것은 아쉽다.

4) 학생인권조례 운동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 같다. 당사자이면서도 당사자로서 운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측면들이 농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민으로 가져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 제정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 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던 성소수자들이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스스로 선언하면서 권리를 외쳤다. 수많은 우려와 달리, 점거농성장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커밍아웃의 공간이자 연대를 확장하는 거점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의 기준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했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원안에 가깝게 통과된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공적기관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이슈를 주장하는 농성을 전개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였다.

그런데 점거농성을 하는 동안 얻게 된 가장 무서운 교훈은 보수/혐오세력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점점 더 너무나 악의적이고 교묘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더 이상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세력들 간의 갈등은 단지 ‘보수 대 진보’ 혹은 ‘혐오 대 반-혐오’라는 프레임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수/혐오세력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힘의 권력에 의해서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은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유예시킴으로써 혐오를 보장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분노가 정당성과 만났을 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성소수자인권운동은 보수/혐오세력들의 차별에 맞서는 한편, 국가가 주도하는 인권관련법 제정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인권’담론을 확장해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어쩌면 2014년 서울시청점거농성, 이 무지개농성은 이러한 운동의 흐름에서 정점이라 여겨진다. 아니 오히려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을 앞질러 이야기하자면, 성소수자인권운동은 이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확장하며, ‘인권운동’을 촉발하는 ‘운동’인 만큼 성소수자들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어디로 향해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

밀양 할매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이슈로 만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구부정한 허리로 산에 오르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외치던 할매들의 싸움은 ‘나이든 여성’들이 나약한 주체들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건한 주체들이며, 경제적 이익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투쟁이었다. 처음의 송전탑은 하나의 쟁점으로서 집중하여 조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적 연대라는 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3년 5월, 알몸으로 저항하며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할매들의 모습은 인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이들을 밀양으로 불러 모았다. 할매들의 투쟁은 송전탑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남성 노동자들 혹은 젊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투쟁-주체들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또한 할매들의 투쟁은 보상금, 즉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삶이란 무엇인지 호소하는 감동을 주었다. “우

리가 밀양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탈핵운동과 인권운동은 서로를 향해 질문하고 답하며 운동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2014년 서울시청 점거농성인 무지개농성 역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다양하게 제기한 싸움이었다. 어쩌면 ‘질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점거농성’이라는 형태로 제기할 수 있었던 판단과 결정력도 성소수자인권운동의 눈에 띈 성장이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정권을 거쳐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혐오세력들은 실질적인 압력단체로서 현실적인 힘을 거세게 행사해왔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했고, 서대문구청은 이미 결정된 장소 사용 승인을 갑자기 취소하는가 하면,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주민들의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았고, 공적 장소의 사용을 불허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14년 퀴어퍼레이드는 보수/혐오세력들에 의해서 저지당했고, 이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으나 그러한 성소수자들의 현실이 사회적으로나 운동단체들에게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처음에 서울시민 인권현장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혐오세력들의 시도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울시민 인권현장 공청회 난동이라든가 서울시의 인권현장 무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사과를 하는 행위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⁶⁾’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성소수자 현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수자라는 쟁점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되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가시화하고 거리에서 외치는데도 특정한 세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묵살되고 있는 상황임을 체감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시사하고 있듯이 말이다. 서민을 가장 잘 챙기는, 그리고 누구보다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려는 정치인으로 칭해지던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현장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충격이었다. 충격에 빠진 것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만은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어느 정도는 ‘진보진영’으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보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언어의 탄생 :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위기감과 절박함 속에서 대응 모색했다. 기나긴 논의 끝에 점거농성을 결의하였다. 2014년 12월 6일, 서울시청 점거농성인 무지개농성에 돌입했다. 이것은 마치 “날마다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가 날아오는 주먹을 움켜잡고 눈을 치켜뜨고 이제는 “맞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⁷⁾” 성소수자와 그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시청에서 서울시민인권현장 선포를 거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를 압박하는 혐오세력에 맞섰다. 그것은 차별 금지를 일부의 일로만 여기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동성애 차별금지 앞에서 망설이는 시민사회, 동성애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를 향해 벌인 인정투쟁이었다. 또한 ‘인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인권의 의미는 폭력과 차별 그리고 배제로부터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투쟁이었다. 서울시청 점거라는 강력한 저항은 역설적으로

6) 성전환자 차별금지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7) 저들이 아무리 막아도, 우리가 대세다 [2014.12.22 제1041호]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라는 폭력의 심각성을 증명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2011년 서울시의회 점거농성과는 사뭇 다른 싸움이였다. 2011년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은 그야말로 협상력을 높여서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인권기본권이 지니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투쟁방식이였다. 그래서 그 성과 역시 어느 정도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인권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서울시청 점거농성은 문제해결과 국면 타계에 집중된 점거농성이었다기 보다는 한국사회와 운동진영에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와 같은 침예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선택된 점거농성이였다. 물론 박원순 시장 면담과 동성애 혐오발언에 대한 사과, 인권헌장 선포, 헌장 제정과과정에서 벌어진 혐오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등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향한 4대 요구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안 보다 더 실질적인 무지개 농성의 요구안은 ‘시민/사회/진보 진영’을 향해서 있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혐오라는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거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을 밝혀라. 당신들은 누구의 편에서 서있는가?”에 답하라는 것이였다. 성소수자들은 인권이라는 가치가 현실정치의 각축장에서 어떻게 쟁점화되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라고 강하게 외친 것이다. 이번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론장에서 배제되던 성 소수자의 항의가 주요 선출직 정치인이자 잠재적 대권 주자의 사과를 받아낸 것도 있겠지만, 진보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넘어서 ‘성소수자/인권이 자신들에게 무엇인지’에 관한 실천적인 답을 들은 것이다.

2014년 12월 7일, ‘성소수자 인권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촉구 인권시민사회’ 긴급기자 회견이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해 공익인권법 재단,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들장애인야학,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 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함께 연대해왔던 정의당과 노동당, 통합진보당, 녹색당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공동요구안에 연명을 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다⁸⁾. 그러한 과정에서 동성애를 둘러싼 조금은 진일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론보도, SNS, 단체 성명 등을 통해서 동성애자의 존재자체에 대한 찬/반이라는 인식들을 넘어서, 혐오와 인권침해, 혐오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인권, 지지와 존중의 차이,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와 박원순 시장평가 등 다양한 논쟁들이 과거에 비해 의미있게 전개되었다.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무게감 있는 답변을 받은 것은 성소수자인권운동이 다른 운동에도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저변을 확장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수자들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소수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즉 자기 삶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특징이다. 이것이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소수자가 가시화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것은 자신들이 느끼는 분노가 정당한 것이며,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정당한 자존감이야말로 무지개농성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였다. 무지개농성장

8) 성소수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답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첫째, 인권이, 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용인되는 순간 이는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에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둘째, 인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행정적 편의 속에서 타협하거나 개별 이해관계 속에서 거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은 마치 ‘한국 인권의 현주소’라는 컨셉으로 일부러 기획한 전시장이 해도 좋을 만큼, 놀라운 의미들로 가득하여 (치절하고 비극적이어야 한다는 애초의 점거농성의 기조와 달리) 유쾌하고 미학적이었다. 농성장 운영 역시 농성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농성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슬로건에다가 성소수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생생한 의미의 두께를 만들어주었다.⁹⁾ “차별받지 않는 것은 권리고, 차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혐오에 맞설 기본권이 없어서 죽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등 각양각색의 문구들로 촘촘하게 채워졌다. 무지개농성장이 그야말로 다양한 무지개색깔과 다양한 문구들로 채워질 때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슬로건은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누구에게라도 성소수자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로 짝 채워진 언어가 되어갔다.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차별이나 혹은 인권침해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이자 차별인지를 설명하는 것에는 많은 전제들을 필요로 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은 침해당한 권리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침해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즉 사회적으로 침해를 ‘침해’로서 인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인식이 없다면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비참함은 그저 하나의 재수없는 일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고통도 사회적으로 합의 혹은 인정받아야 침해받은 권리로서 규정되지만, 더욱 심사를 뒤틀리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고통에도 서열이 있다는 점이다. 그 서열의 기준은 ‘시급하고 절박함’이다. 그 기준 속에서 ‘경제적 생존권’이 맨 위를 차지하는 듯 해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잘 와 닿지 않는 이슈였다. 그런데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생존권’이다”라는 말은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라는 정도로만 익숙했던 생존권이라는 말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인 측면들과도 만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무지개 점거농성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인권이라는 가치가 현실정치의 각축장에서 어떻게 쟁점화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성소수자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냈다. 보수/혐오세력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최전선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서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여럿이, 함께 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저지 운동에서부터 무지개농성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왜 ‘굴뚝에 오른 노동자 투쟁’ 앞에서 무엇 때문에 위축되었을까 다시금 궁금해졌다.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볼게 된다. 익숙한 피라미드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차별과 고통을 서열화하는 방식과 그 속에서 경제적 생존권을 서열의 맨 위에 놓는 것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 인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이미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긴장감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인권’이

9) 시청경찰들이 농성장에 부착돼 있던 연대단체들의 성명서를 기습적으로 훼손했을 때, 찢겨나간 성명서의 흔적을 그대로 남긴 채, “지금 여기 찢긴 것은 종이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소수자의 외침이다”라는 종이가 덧붙혀졌다. 그러자 농성장 곳곳에는 끝말잇기 놀이처럼, 다양한 문구들이 덧씌워졌다.

경제적 생존권에 비해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는 비판이나 회의감이 있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성소수자들이 경제적 생존권을 갖고 싸우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덜 치열했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둘러싼 긴장이라는 쟁점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해보게 된다. 말하자면 무지개농성장에 걸었던 구호처럼, 인권은 경제적 생존권만큼이나 중요한 ‘시민적, 정치적 생존권’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 경제적 생존권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생존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곳간에서 인심난다’와 같은 논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처럼, 경제적 생존권은 시민적, 정치적 생존권과의 관계들을 실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관계설정의 실천적인 모색을 방해하는 보수/혐오세력들의 논리와도 맞서야 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저지 운동에서부터 2014년 무지개농성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보수/혐오세력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인권기본법에 대응하는 싸움을 해왔다. 인권기본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이었고, 그것을 빼야한다는 논리가 혐오였다. 그렇게 차별과 혐오에 맞서면서도, 이러한 쟁점이 ‘성소수자 이슈’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늘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우려들을 털어버리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제 성소수자 운동은 단지 성소수자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다른 인권의 이슈를 촉발하는 운동이자,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인권의 베이스캠프’라는 자신감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다.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소수자 이슈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반증이니까. 무지개 농성의 성과는 바로 그것을 확인 하는 싸움이였다. 성소수자 인권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며, 인권의 이슈에서 다른 운동이나 담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임을 확인했다.

수년간 부딪혀온 것처럼, 보수/혐오세력들은 단순한 종교집단이거나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집단이거나 흩어진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정치세력화된 집단이며 그들의 행보는 더욱 막강하고 복잡해졌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제정하려던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폄하할 뿐만 아니라 축소하려 하는가하면 정당들과 결탁해서 혐오발언이나 범죄를 공공연하게 자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혐오에 맞서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무지개 농성을 마무리 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경험을 믿고, 보수/혐오세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며, 보다 단단한 인권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농성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게 했고, 또한 인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2014년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 성과와 과제

나라 _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회원

무지개농성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공식 제도에 새겨지는 것을 둘러싼 싸움의 일환이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반동성애 혐오세력과 싸움이었다.¹⁰⁾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발하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내세운 혐오세력의 조직화와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거센 역습이 있었다.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긍심을 키우고 존재의 인정과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던 성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수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이 확인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무지나 무시로 인해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혐오를 이용해 공공연히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는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이었다. 인권의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인권의 정치성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2011년 겨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한국 성소수자 운동 사상 처음으로 벌인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 농성은 이번 싸움의 디딤돌이었다. 동성애 반대를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혐오세력, 이에 타협하려는 교육청과 시의원들에 맞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절박하게 선택한 점거 농성은 1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발의의 힘과 당시 큰 규모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운동의 여파 속에 민주당을 견인하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또 달랐다.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가 집권하고 기성 정치가 더욱 우경화하면서 혐오세력은 기세를 올렸다.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혐오세력의 논리를 반복하는 혐오발언이 증가했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적인 의견을 냈고, 서울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들의 공공장소 사용을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혐오세력은 강원학교인권조례를 무산시키더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마저 철회시켰다. 국립국어원의 사랑의 정의도 과거로 회귀했다. 혐오세력은 2013년 12월 성북구 주민인권선언 선포식을 무산시켰고, 2014년 1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위해 연 공청회에도 집단적으로 참여해 인권 활동가들을 위협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쳤다. 급기야 2014년에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와 대구 퀴어퍼레이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혐오세력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꿰찼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10) 혐오세력 활동의 흐름과 조직들은 “성소수자에게 공적 공간의 의미: LGBT운동 전략으로서의 존재 드러내기”(곽이경,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혐오세력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동안 전통적인 우익 단체들도 반동성에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혐오세력의 정치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 불평등과 위기가 심화하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현실과 맞물려 성소수자 혐오가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공격하고 기성 정치권을 단속하는 데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대체로 혐오세력에 무능하고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다.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운동과 좀 더 가까운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였다. 서대문구청장은 혐오세력에 협력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구인권위 권고도 무시했다. 성북구에서는 혐오세력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당시 성소수자 운동은 진보 교육감 후보 조희연 선본과 정책협약을 맺었는데 선본 일각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혐오세력의 공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선본 내부의 강력한 비판으로 조희연 후보가 그 무례하고 잘못된 요구를 철회하고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쓰디쓴 현실을 체감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기성체제 전반이 혐오집단이거나 혐오에 타협하는 이들이기에 혐오세력은 사회적 지탄이나 반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혐오세력이 인권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을 과감하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공권력의 방조, 때때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변화를 거스르려는 시도만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변화했다. 성소수자 운동과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세계적인 성소수자 권리 증진 흐름 덕분에 더욱 그렇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은 동성애 포용도가 지난 6년 사이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동성애 포용도 증가를 보여줬다.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도 8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로 성소수자 인권 지지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 혐오세력에 맞선 싸움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0년 혐오세력이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공격하며 동성애혐오를 조장했을 때 혐오에 맞선 목소리를 내며 결집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인련과 차세기연 등이 ‘동성애혐오반대공동행동 열림’을 조직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 승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이 제정될 때 성소수자 인권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됐다.

2013년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혐오세력에게 굴복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한 이후부터 성소수자 운동 전반은 혐오세력 활동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기존 단체들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다채로운 저항도 등장했다. 하지만 돈과 교회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권력을 등에 업은 혐오세력의 공세는 성소수자 운동을 지치게 했다. 자원과 권력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물량공세 식 민원제기,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한 혐오 선동을 통해 온갖 성소수자 인권 의제와 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 표현에 득달같이 달려들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이 이에 굴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실질적인 권리 침해와 폭력을 경험하는 일이 늘어 갔다.

2014년 퀴어문화축제는 결정적이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운동의 성장, 지지세력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혐오세력과의 충돌로 성소수자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새로운 각축장이 됐음이 드러났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세력의 폭력성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공청회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혐오세력의 악다구니를 마주하는 일은 오랜 활동가든 이제 막 커뮤니티에 나온 사람이든 견디기 힘든 충격이고 상처다. 개인에게나 운동에게나 생경한 경험이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혐오에 맞선 싸움의 성격과 전략에 대한 토론이 시급히 요청됐다.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후퇴와 일베 현상처럼 혐오가 증대하는 현상과 맞물려 성소수자 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혐오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농성이 중요했다. 농성은 무엇보다 성소수자 운동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기구와 개혁적 정치인이 혐오에 타협하고 사실상 차별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을 뒤바꾸지는 못했지만 농성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싸움판을 만들기 시작했다. 농성은 성소수자 운동의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20년 역사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모욕을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 운동의 밑천을 셈할 수 있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농성단은 ‘승리’와 ‘투쟁의 시작’을 말하며 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지개농성의 중요한 성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차별과 모욕에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권리를 갈망하는 성소수자 대중의 요구를 확인했다. 무지개농성 돌입에 성소수자들은 커다란 지지와 참여로 화답했다. 농성 돌입을 결정한 활동가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준의 호응이었다. 농성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성소수자들이 달려왔다. 시청 근처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농성장에 다녀갈 정도였다. 매일 저녁 문화제 참석인원이 늘어났다. 농성장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후원으로 지지를 표현했다. 단 6일 만에 4천만 원에 가까운 기금이 모였는데 상당수가 성소수자들의 후원이었다. 성소수자 운동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서도 보기 드문 모금 성과였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 경험을 통해 자긍심과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연대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한다. 혐오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싸울 때 사기저하를 막고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로부터 서울시청 농성과 같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은 가히 드물었다. 성소수자 운동의 활력과 잠재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새로운 활동가 층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둘째, 성소수자 인권 의제가 시민사회운동/진보진영의 중요한 준거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발언에 관한 것인 만큼 비중 있게 여겨졌고, 성소수자 운동이 서울시청 점거 농성이라는 과감한 행동을 단호하게 추진해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농성 돌입 전부터 이미 주요 시민단체들이 인권헌장 무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더해 성소수자들의 강력한 항의 행동이 주목받으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논쟁이 확대될 수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끝까지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직접 농성 대표단을 만나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번 농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무지개 농성장은 ‘한국 사회 인권의 베이스캠프’가 됐고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는 외침이 뻗어나갔다.

셋째, 성소수자 운동이 쌓아온 연대의 폭과 깊이를 확인했다. 진보정당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장애운동, 인권운동, 이주운동, 지역운동 등 광범한 세력들이 농성을 지지했다. 하루 만에 수백 개 단체가 지지연명에 참여했다. 지지는 말로만 그

친 것이 아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물품을 지원했다. 지지방문, 후원도 줄을 이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부터 진보적 종교인들까지, 오랜 친구들만이 아니라 생소한 얼굴들이 함께했고 서로를 확인했다. 연대는 단순히 입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한 퀴어버스로 대표되는 연대의 경험,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에서 활약하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존재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물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끝까지 인권헌장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성소수자 운동과 혐오세력의 세력 관계를 반영한다. 6일 농성으로 뒤집을 수는 없는 힘의 차이가 존재한 것이다. 성북구에서도 끝끝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사업이 좌초시켜 서울시의 선례를 반복했다. 하지만 박원순 사과를 끌어낸 것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투쟁의 중요한 성과였다. 박원순 지지층 일부가 흔들렸고, 박원순은 내상을 입었다. 물론 그는 여전히 기울어 있는 저울추에 따라 행동하면서 저울추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저울추를 바꿔야 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 저울추의 크기를 확인해주는 동시에 누구와 함께 그 작업을 수행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성소수자 운동은 혐오세력과의 긴 싸움을 이제 막 시작했고 다음 라운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 농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채 농성을 종료하는 것을 아쉬워한 이들도 많았다. 농성의 목표와 운동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에 차이가 존재했다. 성소수자 운동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토론을 확대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농성 돌입과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상황, 농성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다. 이러한 평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무지개농성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농성 돌입 결정까지

서울시민 인권헌장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을 삭제하려는 혐오세력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인권헌장이 상징적인 의제로 떠오른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정치의 시금석이였다. 혐오세력도 이 때문에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인권헌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친동성애’라며 공격했다. 동성애혐오를 이용한 박원순 공격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인권헌장 국면에서 강화됐고, 서울시도 이런 공격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 미국에 가서 동성결혼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알려지자 재빠르게 해명한 일은 그가 성소수자 인권 쟁점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엿볼 수 있게 했다. 둘째, 진보적인 학계 인사,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이 사안에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운동진영이 인권 거버넌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이 부분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¹¹⁾) 이런 인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토론회, 공청회를 비롯해 헌장제정 과정에서 혐오세력의 폭력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다고 말했다. 전

11) 2015년 1월 20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성북무지개행동(가)이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위원들은 차별금지 사유 명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시민위원들을 설득했다. 서울시가 원칙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제정위원회가 타협하지 않고 헌장을 올바르게 제정한 일은 매우 중요했다. 서울시의 비민주성과 무원칙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헌장선포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혐오 증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었다. 퀴어퍼레이드로 성소수자 혐오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일삼은 자들과 성소수자혐오 세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지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여타 혐오세력의 공세와는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 문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 맥락은 한국사회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임을 강조해야 하는 그간의 상황과 동일했다. 서울시가 인권헌장 제정을 부정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다. 서울시는 이미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회피(실제로 삭제)함으로써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나아가 인정받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결정적으로 12월 1일 박원순 시장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만나서 한 ‘사과’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입증됐다.¹²⁾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던 유력 대권 주자의 이러한 행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우리가 대접받는 수준을 통감하게 하면서 분노를 일으켰고 시민사회, 인권 진영에 정치적 위기감을 불러왔다.

성소수자 운동은 인권헌장 제정에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헌장에 성소수자 인권 원칙이 담길 수 있도록 성소수자들이 시민위원회에 자원하도록 독려했다. 덕분에 제정위원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다. 제정위원회에 혐오세력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집요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을 삭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혐오세력이 보인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즈음부터 성소수자 운동진영은 적극적으로 인권시민진영과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우리는 혐오를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주장을 계속 의견으로 취급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주된 문제는 제정위원회라고 여겨졌다. 논란 때문에 제정위원회에서 원칙을 훼손한 헌장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인권헌장 제정이 다가올수록 서울시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커졌지만 제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1월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제정위원회는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주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까지 헌장안 통과를 막으려 했고, 회의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아주 신속하게 헌장 제정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을 담은 인권헌장을 만들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저버린 서울시의 억지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성소수자 운동은 신속하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를 규탄했다. 국가기관, 그것도 서울시라는 주요 지방정부가 혐오를 용인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성소수자 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었다. 성소수자

12) 12월 2일자 기독신문, “박원순 시장 “시민인권헌장 논란 좌송”

활동가들 사이에서 위기감과 절박감이 높아져 있었기에 강력한 항의행동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시민사회 각계에서 신속하게 서울시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온 것도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거부한 뒤 첫 회의(12.2)에서 점거 농성이 제안됐고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확대 회의(12.3)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다수 활동가들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박원순 지지자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등), 충분한 동력 없음에 대한 불안감, 인권헌장 이슈가 성소수자만의 쟁점으로 축소될 것에 대한 걱정 등을 제기했다. 인권헌장 제정과정을 통해 인권의 원칙과 혐오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성소수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다.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내 싸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성소수자 운동의 동원력과 연대의 폭과 깊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 애초에 농성이라는 전술을 채택하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

농성계획이 유보되고 논의된 계획은 대중 참여형 캠페인과 상징적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컸기 때문에 문제를 알리기 위한 극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는 정서가 존재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12월 1일 발언이 4일경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벌이고 서울시 구청사 도서관 옥상에서 플랑을 내리는 액션을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던 중인 12월 4일 밤, 일부 활동가들이 절박함을 드러낼 좀 더 강력한 항의 행동을 제안했다. 이때 제안된 것은 일종의 고공농성이라 할 수 있는 옥상 점거농성이었다. 소수의 결의된 행동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소수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해 저항의 초점을 형성하려면 운동 속에서 최대한의 동의와 지지를 모으고 조직해야 했다. 다시 한 번 확대회의가 소집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옥상 액션을 준비하기 위해 12월 5일 오전 사전답사를 하던 중 차질이 생겼다. 구청사 옥상이 동절기를 맞아 폐쇄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12월 5일 밤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열렸고 20명 가까운 활동가들이 모였다. 박원순 발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로비 점거 농성 계획에 대다수가 동의했다. 그러나 농성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로비 점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다. 농성이 우리 편에 유리하지 않은 무리한 행동이라며 농성 전술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 이전부터 강화된 혐오세력의 공세로 인해 위기감과 무력감이 고조되던 판에 박원순 시장이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분노 표출’은 너무나 필요하고 정당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구호에서도 절박함이 드러났다. 실제로 혐오와 차별은 우리의 존엄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지금껏 혐오로 인해 삶을 박탈당한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면 이 구호는 때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점거 농성에 동의한 활동가들은 무지개농성단을 구성해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점거 돌입 시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주말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시청 직원들도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전업 활동가가 소수인 성소수자 운동의 특성상 주말의 이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대중 참여를 고려하면 반드시 토요일에 농성에 돌입해야 했다. 요구사항은 박원순 시장 면담과 사과, 인권헌장 선포, 현장 제정과정에서 벌어진 혐오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이렇게 네 가지로 정했다. 하지만 행동에 돌입하는 것 자체에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긴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요구 사항 네 가지 모두 따내기 힘들 것이라는 정서가 컸다. 농성에 돌입하는 실질적인 목표는 우리의 투지를 보여주고, 우리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저항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12월 10일을 기한으로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를 규탄하고 박원순 시장 정치의 파탄을 선언하면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농성을 마무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농성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현장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활동가들이 역할을 나누고 농성 돌입 시간을 정했다. 며칠에 걸쳐 긴박하게 진행된 이 논의 과정에는 통틀어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경우 처음부터 밀접하게 논의와 실행에 참여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운동의 저변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의 과정 덕분에 활동가들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강력한 항의행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했고 단호하게 행동에 돌입할 수 있었다.

싸움판, 커밍아웃의 판, 연대의 판

12월 6일 11시 4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잠시 동안이지만 시청사에 대형 무지개 걸개가 내걸렸다. 시청 측과 경찰의 위협과 방해가 계속됐지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농성장을 지켜냈다. 1시에 예정됐던 일인시위에 함께하러 온 사람들과 농성 돌입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 저녁 무렵에는 1백 여 명에 이르렀다. 연대도 신속하게 조직됐다. 긴급한 호소를 듣고 씨앤앰 노동자들을 비롯해 인권단체, 장애단체, 진보정당, 성북구 지역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달려왔다. 서울시청 점거농성이라는 과감한 선택 덕분에 유례없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와 연대는 더욱 확대됐다. 일요일인 둘째 날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연 등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지 기자회견이 신속하게 열렸다. 미리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한 것도 의미 있었다. 언론의 주목과 광범한 연대 때문에 서울시는 감히 농성을 강제 해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선전물 부착 방해나 전기 공급 차단 같은 치졸한 방해가 이어졌지만 강력하게 항의해 나갔고 농성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면 농성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기우였다.

농성은 높은 자발성과 폭넓은 지지 속에 진행됐다. 물품 조달부터 언론대응, SNS 홍보, 국제연대 조직까지 활동가들의 헌신과 다채로운 기여가 돋보였다. 미디어팀은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소식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아름답고 재기 넘치는 팻말을 직접 만들어 농성장을 채워갔다. 일인시위와 대 시민 선전전을 비롯해 농성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 매일 저녁 열린 문화제는 연대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끼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지지와 후원이 놀라울 정도로 쏟아졌다. 하루하루 후원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연대의 폭도 넓어졌다. 주말을 거치며 농성 돌입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특히 점거 농성이라는 형식의 강점이 십분 발휘됐다. 6일에 걸쳐 우리는 시청 로비 공간을 철저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기가 높아져 갔다. 혐오세력이 농성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예수재단 같은 극소수 광신도들뿐이었다. 이들은 맞불 기도회를 하며 스피커로 농성을 방해하고 간혹 가다 개별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꽤나 스트레스였지만 농성 자체를 위협하지는 못했다. 에스더기도운동 등 동원력 있는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박원순을 비판하는 농성을 자신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점, ‘중북 콘서트’가 극우 세력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월요일까지도 서울시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JTBC 메인뉴스에 생방송으로 농성 소식이 보도되는 등 농성이 이슈로 부상했음이 분명해졌다. 화요일에는 좀 더 적극적인 항의행동이 이루어졌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항의하는 그림자 시위를 조직했다. 오전 프레스센터와 오후 성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박원순 시장을 마주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림자시위는 박원순 시장 면담과 사과를 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성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해냈다는 분위기였다. 면담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대표단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대표단이 내려와 보고를 한 뒤 면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즉석에서 분임토론이 이루어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고 토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수십 명이 줄 서 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 발표 내용과 박원순 시장이 면담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분노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민 인권현장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농성 참가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확대 상황실회의에서 농성을 이끈 주요 활동가들은 긴 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면담과 사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주요한 쟁점이 됐다. 사실 활동가들은 수요일 새벽까지도 면담과 사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그리고 농성을 통해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애당초 10일까지라고 생각했던 계획을 수정해 최소한 주말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면담 요청이 왔을 때 활동가들은 자못 당황했고, 면담의 의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원순 면담과 사과는 분명한 성과였다.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과의 정치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를 농성단 대표단과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죄송하다’, ‘제 잘못이다’ 하는 말을 하게끔 만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투쟁이었다. 흔히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박원순이 목사들을 만나서 한 말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었는지 따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정치적 효과를 보아야 했다. 물론 사과와 별개로 요구사항의 수용,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실적 힘을 고려해야 했다. 농성이 만들어 낸 성과를 분명히 하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쟁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 활동가들은 어렵게 농성 종료를 결정했다. 농성장 전체 토론에서의 분위기와는 상반돼 보이는 결정이었기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농성의 성과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여기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듯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했고, 농성이 승리한 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했다.

12월 11일 저녁 농성단은 승리 보고 문화제를 개최하고 축하 속에서 농성을 공식 종료했다. 농성이 마무리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농성 종료를 알린 기자회견에서 한 농성 참가자의 발언은 농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냈다. “6일간 차별, 혐오, 부정의에 맞서고 싶은 용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연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을 바꿔나가는 싸움을 할 때, 6일간 함께 했던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농성의 경험이]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상, 일터에서 권리를 찾으려 할 때 힘이 되고, 그 질문의 끝을 찾으려 할 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싸웁시다.”(수수) 농성을

마무리하며 낸 입장서의 제목과 승리 보고 문화제의 제목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는 이 싸움이 성소수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농성 돌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목표(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와 우리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자)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것이다.

농성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소수자 대중의 지지였다. 이번 싸움을 통해 드러난 자긍심, 변화를 향한 열망,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는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다. 한편, 20년간 성장해 온 성소수자 운동의 역량, 사회운동과의 연대의 수준도 확인됐다. 이번 농성과 같은 싸움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활동가들의 자발성, 헌신, 협력하는 태도가 빛났다. 전반적인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이 글에서 세부적인 평가는 생략하지만 이번 농성이 성소수자 운동에 싸우는 법에 대해 다양한 교훈을 남긴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임은 확실하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졌다

무지개농성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혐오세력은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성북구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포기한 것은 나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무지개농성은 한국사회 성소수자 인권 현실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권 현실은 투쟁을 요구하는 처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 연금개혁,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대중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동시에 종북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세상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혐오와 폭력이 칭송받는다. 2015년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잇달아 구속하려는 등 운동 전반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도 감지된다. 한편에서 국가주의, 가족주의, 도덕주의, 성적 보수주의 강조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진보적인 의제, 특히 섹슈얼리티 쟁점은 위축되고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 년 간의 경험을 통해 혐오에 맞선 투쟁의 성격, 방향, 목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혐오세력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 확립에 반대해 법과 제도, 공공기관의 관행에 압력을 행사한다. 법제도와 공공기관은 대중의 태도에 준거점이 되고 권리 실현의 주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주요하고 치열한 싸움터가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한국 기성정치와 국가기구의 성격이 문제로 떠오른다. 우리는 공정한 시험장에서 논리대결이나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구의 성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소수자 권리 보장도 증진됐다. 그러나 국가기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기능하는 것은 국가기구의 본질에서 비롯한다기보다 사회적 강제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국가기관과 정치권을 향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런데 단지 당위와 논리만으로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단단한 운동이 뒷받침 돼야 한다. 2007년 이후 성소수자 운동에서 벌어진 주요한 투쟁들은 여러 차례 활동가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성소수자 대중의 지지와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 성소수자 운동이 대중 조직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운동을 추동할 자원과 동력으로 쏠려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성소수자 인권은커녕 ‘북한 인권’을 빼면 인권 의제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혐오세력을 지원하거나 혐오세력의 논리를 반복한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인권’을 수사로 활용하는 야권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이 혐오세력에게 굴복해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익 혐오세력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성애혐오를 이용한다. 성소수자 인권은 거추장스러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제도 정치권을 통해 성소수자 의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혁을 성취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진보정당이 건재했을 때 그나마 존재하던 통로도 크게 축소됐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제도화는 정치 상황이 변화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지개농성이 보여줬듯이 우리 권리를 위한 싸움을 유예하지 말아야만 성소수자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다. 성소수자 운동은 차별금지 원칙이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혐오세력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소수자 가시화와 (긍정적) 재현을 공격하면서 편견을 조장한다. 성소수자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대는 편견을 없애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은 주로 대중적 선전의 형태를 보이고, 다양한 논리가 이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혐오다. 가족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별 고정관념, 여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다양하게 동원되고 최근에는 소수자 보호,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성소수자 운동은 권리 주체로서의 가시화를 피하면서 다양한 혐오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부터 에이즈 혐오를 비롯한 차별적인 관념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차별적인 관념이 힘을 잃을 때에만 혐오세력의 거짓말과 위선도 통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실체와 성소수자혐오가 사회 전체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해야 한다.

또 성소수자 운동은 무지개농성에서 확인한 성과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대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 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성소수자 운동의 존재감을 다양한 사회 영역, 운동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활동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정치적 커밍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한 변화들을 성소수자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운동이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시민사회와 개혁 성향 사회집단 속에서 성소수자 의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성소수자 운동이 적극적 권리 획득 운동이 돼야 한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삶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야 한다. 운동은 성소수자들 스스로가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목소리들을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무지개농성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정말 잘 싸웠다. 그 덕분에 유리한 고지에서 2015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혐오에 맞선 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내놓고 있다. LGBT 인권포럼은 운동을 날카롭고 풍부하게 만들 기회일 것이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은 말 그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날이 돼야 한다. 무지개농성의 활력과 투지를 거듭 확인하는 2015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자신감이 근거 없는 낙관이나 협소한 자기만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엄연한 혐오세력과의 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이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긍심과 가시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성소수자 집단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집단 가운데 하나다. 제도적인 권리 보장은 거의 전무하고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제도 정치 안에서의 힘의 관계가 대중의 의식을 오롯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20년 전과 오늘날 성소수자들은 삶의 모습도,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도 달라졌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나서자.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운명과 성소수자들의 운명은 동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한국사회의 인권을 묻다」에 대한 토론문

한가람 _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발제자가 정리한 것처럼 지난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2007년의 차별금지법 투쟁,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투쟁의 분절점과 연속성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미국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민권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과 유사/대비되게)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장애 인권 투쟁을 중요한 참고 선례 삼아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자가 반복하여 방점을 찍듯, 성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당한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슬로건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듯 성소수자 인권 이슈가 이른바 경제적 생존권과의 사이에서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면서 이를 통해 성소수자 운동이 성소수자 문제만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최전선에서 제기하는 지평을 열어가고 있고 열어가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제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점들이 이번 농성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어떤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였다는 것과 연관된다고 여겼습니다.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위축감을 넘어선 결과 “우려를 털어버리고 자신감을 갖자”라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쩌면 농성의 시작 자체가 이러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토론문에서는 이번 무지개 농성장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주체의 적극적인 경험과 변화를 중심으로, 발제자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부연 또는 반복을 하고자 합니다.

2.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슬로건은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가장 기초에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존재가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와 존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구체적 인권으로서 노동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거권, 가족구성권과 같은 인권 목록들을 아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들이 맞닥뜨려 왔고, 지금도 직면하는 현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는 별거벗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있는 존재라는 점이 제도적으로는 표상됨에도, 막상 서울시 인권현장 사태처럼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가장 하위의 법적 효력을 가진 ‘현장’에서는 부정되었던 것은 이러한 성소수자의 실제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생존, 생명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멸시와 조롱, 고립, 혐오와 폭력은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공간을 없게 만듭니다. 여러 성소수자들의 운동은 그러한 고립 속에서 낭떠러지의 어려움을 겪었던, 또 겪고 있는 자기 또는 동료의 상황을 밀친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가 성소수자들을 농성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선언적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 성소수자 인권 지지영상까지 촬영하여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도 지워버리려는 종교집단의 압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던 분노를 가졌었습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세웠던 요구안들은 모두, 인권현장을 통해서 곧바로 구체적 권리 획득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요구, 성소수자들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요구로 수렴됩니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가 성소수자 운동이 ‘인권의 베이스캠프’, 또는 인권의 최전선이라는 말은, 이미 권리의 담지자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존재들마저도, 노동자나 온 사회의 애도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마저도 별거벗은 채 내쫓기는 국면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해고가 살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이러한 구호를 성소수자들은 “인권은 목숨”이라고 가져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식이 과거에는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며 나서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더욱 나눌 수 있었고 명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해 왔지만, 이것은 극히 소수의 문제이거나 소위 ‘경제적 생존권’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요구라는 사회의, 그리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어쩌면 그것에 동의하는 내면화된 낙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성소수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의 로비를 점거하면서, 또 점거에 이른 사태들을 겪고 내보이면서,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고, 나아가 “당신이 인권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기에

이름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점거농성을 결의하며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것이 각성이라기보다는 표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러한 표출이 잘 이루어진 것은, 발제자가 언급하듯 함께 모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고립되고 별거벗은 존재들이 점거농성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점거농성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운동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일대오’가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내는 ‘조직적인’ 싸움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성소수자 운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방식은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발제자가 정리한 것처럼 2007년 차별금지법 투쟁 역시도 게릴라적이었고, 과정과 개인을 중시한 운동이었는데, 개별화된 성소수자들로서는 점거농성이 어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농성이라는 말을 떠나 점거가 공간의 전유/점유라는 점에서 이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카페, 바, 클럽 등의 공간을 전유하는 것. 또한 게이들의 경우 이러한 곳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것. 이런 모습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여 있으면 성소수자들은 재미있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농성에 돌입해서 비장하게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울부짖으면서도, 긴장 속에서도 배시시 웃게 됩니다. 희로애락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성소수자들의 전유공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이 토론문을 쓰기 전에 든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왜 농성에 들어가면서 매일 문화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11년 서울시의회 점거에서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첫날부터 문화제를 생각했었고, 다음날, 다다음날의 문화제 공연에서 공연할 사람들의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농성 기획단이 농성장 한 구석에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동시에 농성장에서는 “예뻐! 예뻐!” 환호가 울려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문화제가 없는 시간에도, 경찰과 공무원들과의 충돌이 계속되었지만, 일상보다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점거를 더 하고 싶고,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온돌과 좋은 환경은 이러한 공간적 의미를 배가시켰고, 넉넉한 투쟁자금과 물려드는 후원물품 속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집보다 따뜻한”, “외롭지 않은”, “있기만 해도 뿌듯한”, “젓과 꿀이 흐르는 농성장”이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거기서 자신도 참여해서 즐기고 싶은 욕망, 가지 못하더라도 힘을 신고 싶다는 바람, 나아가 이러한 욕망의 표출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 중요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부끄럽지 않고 고립되지 않음을 느끼고 싶은 마음과 결합한 결과, 이러한 공간 점유의 정치적 힘이 발휘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들이 전유/점유한 그 공간은 수도 서울의 시청사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은 그러한 공적 공간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랐고, 그렇게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

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수도의 한복판에 즐겁게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바라던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전유/점유 자체가 점거농성의 요구안,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스스로 일정 부분 실현시켜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구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공적 공간에서 성소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자리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성소수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을 ‘승리’라고 기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스로 존엄한 인간이라고 인정받고자 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구였는데,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치열하면서도 즐겁게 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확인을 스스로 한 성소수자들에게 이 농성은 확인으로 남습니다. 이 농성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소수자 주체들에게 남은 변화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지개농성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스로 힘을 확인한 것을 꼽고 싶습니다. 한 성소수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성소수자의 말처럼 ‘농성에 쓰려고 쇠사슬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막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이곳에서 풀고 싶었고, 이렇게 쇠사슬을 푸는 것이 목숨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목격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요? 성소수자가 뭐요?”라는 질문에 성소수자들이 주눅거리지 않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다, 나도 성소수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장이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함에도, 저 스스로도 싸움의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주눅거리지 않으며 지나가는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 왔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번 농성을 통해 성소수자로서 부끄럽지 않음을, 당당함을 이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집단을 형성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아쉬움은, 이러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월 10일 농성장에서 모여진 “박원순 시장의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농성을 통해 형성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발제문에서 설명하듯 어려운 결단이 있었고,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농성 기획단 스스로도 평가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성 이후에 대한 관심 역시도 뜨겁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갈 것인지 그 향배가 궁금하고 고민도 됩니다. 운동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성소수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껏 고양되었던 승리의 감정은, 발제자가 말하듯 다른 곳에서 시작된 농성에서, 또 곧바로 이

어진 성북구청장의 지역 목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서, 다시 한 번 차가운 현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2007년, 2011년, 2014년으로 이어지는 싸움의 경험들은 제도화의 성과보다 성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에게 히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바로 옆에 있음은, 또는 바로 옆에 없더라도 실감할 만큼 사회에 있음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전진은 더디지만 오는 것이고,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을지는 항상 경계하며 나갈 것입니다.

농성장에서 만난 얼굴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별거벗었지만 살아남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빕니다. 무지개 농성에 함께해서 서로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무지개 농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점거의 시간은 계속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인권운동, 무엇을 점거했나, 누구에게 무엇을 움켜주었나

명숙 _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무지개농성기획단 참여

일란 님과 나라 님, 두 분의 발제문을 읽는 일은 즐거운 일이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눈물이 나오기도 했다. 찬란했던 6일간의 싸움을 떠올리는 일이자 모욕적인 한국의 성소수자인권의 현실을 되짚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들, 이번 무지개농성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기에 베풀 수 있는 고민의 깊이와 분석에 찬탄하며, 도대체 토론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일반 인권단체¹³⁾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로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가치를 내세운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로서 이번 싸움의 의미를 짚는데 말 한마디 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며 토론문을 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성소수자들의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저렇게 성소수자들이 많았어? 저렇게 심각한 문제였어?”라고. 이 두 가지 반응은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성장(세력화)을 보여주는 동시에 혐오세력에 동조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가 얼마나 당사자들에게, 인권운동에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 인권의 의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성장은 일란(존칭 생략)의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한 순간 일어난 게 아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성장해왔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면서 가시화된 운동은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출산과 더불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사유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나라가 짊어졌듯이 서울시청 로비 점거농성은 그저 성소수자 운동이 쌓아온 연대의 폭과 깊이로 농성에서 힘을 확인한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2014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08년 보수정권 등장 이후 더

13) 사실 이런 구분이 정확한 것일까라고 항상 의문을 가진 편이기는 하지만 인권운동의 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기에 그대로 쓴다. 흔히 장애인단체나 청소년인권단체와 같이 소수자인권단체 또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인권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일컫는 의미로 쓴다. 일반 인권단체들은 자유권(정치적 시민적 권리)과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중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와 인권운동사랑방처럼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종합인권단체들도 있다.

욱 조직적으로 세력화되고 확대되어 오던 일들일 뿐이다. 나라의 발제문에서도 분명히 짚었듯이 경제 위기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흔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른바 원인돌리기를 노리는 기득권 세력의 혐오의 정치가 주요한 통치방식이다. ‘너희가 이렇게 못사는 이유는 자본에 있지 않다. 국가의 잘못된 정치에 있지 않다. 바로 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저들(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있다’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하며 기득권세력은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사회의 우경화는 혐오의 정치를 동반한다.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예외상태를 항구적으로 만들고 권리의 예외(권리가 박탈된 자)를 양산하며 잉여인구들을 배제하였듯이 말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한 이후 보수단체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한 보수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종북 척결과 동성애 반대이다. 그것(종북 척결과 동성애 반대)은 부국강병을 막아서서 내 삶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들은 선동한다. 우리 삶을 불안하게 했던 그 자본의 정치, 차별과 배제의 정치, 신자유주의를 쉽게 가린다. 그렇게 국가주의는 부활하며 동성애 혐오와 종북 혐오와 만난다. “가족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별 고정관념, 여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다양하게 동원되고 최근에는 소수자 보호,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까지 등장”¹⁴⁾한다.

그러하기에 일란과 나라의 발제에서 모두 짚었듯이 이번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은, 혐오에 맞선 싸움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다. 혐오는 차별을 확대하고 모든 부분의 인권의 후퇴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특히 그 혐오에 대해 무감했던 사람들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혐오세력들의 발언과 행동을 직접 목격하며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몸으로, 감각으로 확인하며 혐오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됐다.

성소수자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다

많은 사람들은 LGBT 서울시청 점거 농성은 성소수자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정치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한국 정치에서 썸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썸해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된 것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그동안 서울시인권조례가 있을 정도니 성소수자도 동등한 시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임을 보여줬다. 그가 장애인권이나 노동인권에 대해서 철거민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할지언정 그는 성소수자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인권이 전체 인권지형, 인권현황에서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를 보여준다.¹⁵⁾ 거꾸로 성소수자 인권은 그가 진짜 인권을 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청 점거로 선언했다. 그리고 권리를 갈망하는 성소수자 대중이 응답했고 점거에 대한 비성소수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힘을 보탤다. 그런 점에서 나라의 발제문에서 짚었던 “행동에 돌입하는 것 자체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실용적, 가시적 목표(성과)를 위해 들어간 농성이

14) 나라의 발제문 무지개농성 평가 초안

15)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의 광화문 광장에 벌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농성장을 합법화하는 것을 보았고, 지하철 2호선 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문제를 처리하는 하는 것을 보았고, 장애인들이 부양제 폐지 및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철역을 점거할 때 그것을 용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 뿐인가. 용산철거민들의 재판을 연기하는 탄원서에 제일 먼저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일란의 발제문)

아니다. 당장 4가지의 요구안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혐오세력에 굴복한 시장이 있는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행동’이다. 그 행동이 선언이고 인권의 의지이고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이 성소수자가 저항하는 주체임을,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어떤 이의 몫도, 어떤 이의 목소리도 차단당하지 않는 평등의 정치를 요구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비록 판을 바꾸지는 못했어도 정치(기존질서)를 흔들었다. 여러 세력들의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위치한 인권의 위계, 차별의 위계를 바탕으로 권력(힘)으로 짓누르려 했던 성소수자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정치의 지형을 흔들었다.

게다가 넓은 의미의 정치나 철학적 의미에서의 정치만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로 외화 되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성소수자는 정치의 주체로 인식됐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면담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은 여론을 포함한 주변의 압박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도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이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렸다.

그러나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의 예산 폐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소수자는 쉽게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이다. 다른 득표에 비해 여전히 낮은 득표로 보일 뿐이니까. 게다가 말하면 쉽게 물러날 것 같은 ‘막무가내’는 아닌, 언젠가 ‘회유가능한’ 진보 진영의 틀(민주세력의 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⁶⁾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농성에 들어갔을 때 박원순 지지세력이나 구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성소수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서 “박원순을 궁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다. 누가 누구를 궁지에 빠뜨렸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소수자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성소수자들의 삶을 궁지에 빠뜨린 게 바로 박원순 아니냐고! 아직도 그 세력들은 성소수자 점거농성을 탓할 것이다. 차기 권력,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훼손한 세력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가 판을 바꾸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는 논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치와 인권이, 민주가 ‘숫적 다수’로 정당화되는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정권교체만이 절대 진리인양 왜곡된 정치의 과잉이 인권과 민주를 왜곡할 것이다. 아직 시민사회에 그러한 흐름은 현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의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은 통칭 진보진영 또는 민주세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일란의 발제문에서 밝혔듯이 농성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진보진영들을 향해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나라의 발제문에서 짚었듯이 “성소수자 인권 의제가 시민사회운동/진보진영의 중요한 준거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의 발제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¹⁷⁾, 또는 구 민주화운동세력들이 혐오

16) 진영논리나 반박근혜, 반이명박 전선 같은 정세인식과 운동접근은 언제나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자들은 차악으로 회유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진보진영의 틀 안에 있다고 보는 그 진보진영은 과연 하나인가를 물어야 한다. 어디까지를 진보진영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민주세력으로 볼 것인가가 이번 투쟁이 던진 질문이자 과제이다.

17) 정치적 자유주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19세기부터 오랜 논쟁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세력의 공격에 취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 그들에게 인권은 장식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권의 가치나 인권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성으로 진보의 의미를 다시 묻고 민주의 의미를 다시 묻는 작업을 시작한 셈이고 이것은 계속 돼야 한다.

어떻게 묻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우리가 혐오운동에 맞선 싸움의 과정에서 외쳤듯이 끊임없이 진보와 민주에 ‘인권, 사람, 존엄’을 호명하는 일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없는 진보가 가능하지, 차별이 있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지를 묻는 일이다. 인권의 내포적 의미를 확장하고 인권운동의 연대는 판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대가 있어야 한다. 연대 없이 보편성이 실현가능할까? 달리 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되고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움을 멈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대란 나와 나의 인권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성으로 경험했다. 농성장에 찾아와준 장애인권활동가, 씨앤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기륭전자 노동자, 여성활동가들, 환경운동가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그/녀들이 어떤 억압과 고통에 처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뻗을 것이다. 뜨거웠던 12월의 밤낮을, 그때 손잡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듯 인권의 보편성, 연대의 의미는 몸으로 읽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권을 점거(占居,占據)¹⁸⁾하다

이번 농성이 전체 인권운동에게 미친 것은 무엇일까?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성과는 인권의 의미를 내적으로 확장한 것이 아닐까. 담론과 운동이 따로 가거나 만들어지지 않듯이 이번 농성은 인권담론을 생산하였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낯설기도 하고 세련되지 않은 이 구호가 단지 절박함의 표현만이 아님을 농성은 보여주었다. 왜 성소수자 인권보장이 목숨(생존권)의 문제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철거민이나 해고자들이 먹고 살 수 없어 생존의 위기, 생존권이 박탈당했다고 일컬었던 그것이다.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살 수 없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사실 자체를 보여주었다. 농성기간 내내 차별과 혐오의 경험을 나누던 시간들, 시청 로비에 소수지만 버젓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이것이 생존권의 문제인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담론이 그동안 술하게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끊임없이 말해왔듯이 차별과 사회권, 차별과 생존권은 그리 다르지 않음을 농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

로 구분되는 자유주의로 읽는 역사 속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역사마다 다르다. 한편으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흐름이기도 했다. 자유주의라는 딱지는 그가 사회주의적 구상과 다르게 현실 자본주의의 경쟁과 개별화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에서 보여준 동성애 차별은 그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게다가 2014년 한국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경제적 자유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박원순처럼 복지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 386세력, 반독재운동의 중심에 있던 세력들은 노무현정권 시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표하는 세력(그들이 신자유주의자이건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건 간에)에게 이들은 진보진영으로 볼 것인가가 아닐까? 다시 말해 진보의 의미나 민주의 의미를 새로이 묻는 것이다.

18) 점거(占居,占據)라는 한자어를 찾아보니 거자가 두 개다. 하나는 있을 거(居)이고 다른 하나는 움켜질 거(據), 의거할 거(據)다. 우리가 점거한 것은 서울시청 로비만이 아니라 농성기간 내내 인권에 의거해 인권운동과 인권담론을 만들고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점거의 시간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인지를 묻는 것이다. 인간이란 밥만 먹고 살수 없는, 자유권이 박탈되고 사회권만 보장된다고 살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존엄’을 부인당할 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참가자 자유발언에서 어떤 이가 말했다 “숨 쉬고 싶어서 나는 농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바탕으로 또한 흔하게 도덕교과서에서 말하는 “차별은 나빠”의 추상성이 ‘차별, 혐오=생존권 박탈’이라는 구체성을 획득하며 도덕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차별과 혐오가 들어오게 됐다.

또한 농성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당사자와 비당사자들을 모두에게 고양시키는 자리였다. 커밍아웃이라는 자기고백적 서사를 농성장에서 발언함으로써, 피켓으로 말함으로써 모두의 서사가 되고 성소수자인권의 살을 채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언어를 획득하였다. 미처 하지 못 했던 그 굴욕의 시간들이, 내 탓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권적 구조의 문제였음을 언어로 갖게 되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인권의 의미, 존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말들을 공유했다. ‘혐오는 의견이 아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차별이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아니 더 많은 말들이 시청공간에서 대자보로, 피켓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산 인권교육의 현장이었다.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 늘 경계하는 편이다. 제도화를 부정한다기보다 제도화가 낳는 인권의 허수아비화, 고정화와 형식화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방은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인권조례에 차별금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있으면 좋지만 정치인의 치적쌓기에 그칠 수 있는 인권헌장에 힘을 쏟아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혐오세력들의 발호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라거나 선포하라는 주장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런 구호에서 낯설음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제도화에 대한 사랑방의 경계 탓일까. 나라의 발제문에도 밝혔듯이 제도적인 권리 보장은 거의 전무하고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현실에서 제도 정치부터 바꾸지 않고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도와 공공기관은 대중의 태도에 준거점이 되고 권리 실현의 주된 통로가 되기에” 인권의 제도화를 소원시킬 수 없는 조건에 있다. 장애인권운동에서 제도화를 둘러싸고 싸우는 이유가 있듯이 소수자운동에서 제도화는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를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실정치권에서의 타협으로 확보할 것인가, 싸움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농성이라는 형식에 성소수자의 색 채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농성이라는 형식이 가지는 과격함(?)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함과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점거농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발랄함을 농성으로 채울 수 있느냐가 논의되었다. 그런데 자

연스럽게 농성기간 내내 무겁고 절박하게 농성장이나 싸움을 이끌어가지는 않았다. 농성장은 진지함은 유지하되 색도 분위기도 발랄했다. 그것이 성소수자들의 삶에서 뻔 자연스런 색 채우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다른 비성소수자들과 즐겁게 조우했다.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반대싸움의 힘든 와중에도 잔치를 벌여 음식을 먹으며 흥으로 투쟁력을 보존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난 연대자들이 힘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저항의 주체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닌가. 익숙하게 보아온 노동자들의 투쟁과는 다른 게.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그 투쟁의 다름, 투쟁 주체의 이미지의 다름을 위계화하는 것이다. 농성은 성소수자들의 방식이 아니라거나, 즐겁게 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라거나 처절한 것보다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적인 게 더 나은 투쟁방식이야 라는 식으로 위계화할 때 우리의 싸움의 방식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들는 게 아닐까.

2015년 존엄과 연대로 혐오에 맞서 싸우자

성북구에서 한판 싸움을 벌였듯이 올해도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 기획을 해야하지 않을까. 혐오에 맞선 연대의 틀을 확장하기, 혐오의 실체를 가시화하기 등. 우리의 몸이 말하는 것, 우리의 감각이 말하는 모욕과 공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공유된 책임의식으로 12월 6일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점거의 시간을 지속시키자.